

# “광주송정·목포·순천역 중심 권역별 교통망 재편을”

## 광주지속가능발전협, 교통정책 라운드테이블

### 철도·BRT 축 30·60분 광역이동체계 구축 제안 AI기반 통합교통플랫폼·광역교통거버넌스 추진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전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광주송정역·목포역·순천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권역별 교통망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버스·철도·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약·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 교통서비스(MaaS)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5일 광주 서구 치평동 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기후도시 광주 교통정책 전망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 시대에 필요한 교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소장은 광주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권역 통합 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소장은 “광주는 생활권 단위에서 버스 접근성이 낮아 대중교통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남 22개 시·군과의 연계 이동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며 “통합 시대에 맞춰 30분 생활권과 60분 광역 이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광주송정역·목포역·순천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권역별 교통망을 재설계하고, 도심 소외 지역 노선을 재편하는 한편 중복된 버스 노선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는 단계적으로 버스 무상교통을 도입하고 광주~목포, 광주~여수·순천·광양 구간을 광역 교통관 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교통은 단순한 복지나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며 저상버스 확대와 무장애 정류장 구축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인구 감소 지역 교통 기반 보장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이진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략팀장은 광주의 교통 구조가 여전히 승용차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광주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승용차가 49.8%로 가장 높고 버스는 28.5%에 그친다”며 “친환경 교통 정책도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교통 전략이 사실상 BRT 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승용차 의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보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5일 서구 치평동 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기후도시 광주 교통정책 전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통합시대 교통정책의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과 이창호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 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광훈 운영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거대한 생활·경제권 교통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광주 상무역~나주 혁신도시~나주역, 광주 소태역~화순 구간 등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버스·철도·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약·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 교통서비스(MaaS)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창호 실장은 “광역철도와 광역버스, 시내·농어촌 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요금과 환승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통합의 가치적 성과가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산업단지과 물류 거점, 교통 인프라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특별시 교통정책은 지역 성장 축 재편을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전남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51개소 '전국 최다'

### 재배계획 전국 면적 46% 3754ha... '산업 메카' 입증

전남도가 대대적인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가루쌀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작물산업화(가루쌀) 전문생산단지 공모 결과 전국 최다인 51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공모 결과 전남도는 교육·컨설팅 분야에서 전국 130개소 중 38.5%에 해당하는 50개소를 확보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또 고도화된 생산 인프라를 위한 시설·장비 분야에서도 전국 4개소 중 2개소를 선점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개

분야 중복 선정된 곳을 포함해 총 51개소가 선정됐다.

교육·컨설팅 분야에 선정된 50개 전문생산단지에 대해 가루쌀 재배기술 향상, 공동영농 체계 확립, 품질 및 조직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3000만원의 교육·컨설팅비를 지원한다.

시설·장비 분야에 선정된 해남 '맑은영 농조합법인'과 장성 '글로벌장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개소당 5억원을 투입해 가루쌀 전용 시설·장비를 확충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해남 '맑은영농조합법인'은 교육·컨설팅 분야에 선정된 50개소 중 1위를 차지하며, 장성 '글로벌장성영농조합법인'은 시설·장비 분야에 선정된 2개소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3월 중 보조금 교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김수빈 해남 맑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전문생산단지 선정으로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앞으로도 전라작물 중심의 농업구조 전환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 정부 '무허가 방문시 처벌'

정부는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이란에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되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금지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발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 공항 운항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관광객 95명이 이날 오후부터 잇따라 귀국한다. 여행사들이 자사 패키지여행 고객들에 대한 대체 항공편을 계속 확보해 추가 귀국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시도의회, 통합 의회 출범 밑그림 모색

### 협의체 구성 돌입...청사 위치·운영 절차 등 조율 첫 임시회·의장 후보 등록 등 공통 기준도 마련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앞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 의회의 소재지, 본회의 개최 장소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들어간다.

5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 의회는 통합 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공식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통합의회 주소지, 본회의 개최 장소, 상임위원회 구성 방안 등 핵심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양 의회의 본회의장 여건을 검토해 통합 의회의 본회의 개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통한 상임위원회 구성안도 마련,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 등 통합 의회 청사의 구성도 살펴보

기로 했다.

출범 초기 운영 절차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첫 임시회와 함께 의원 등록, 의장 후보 등록 등 개원 절차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장 선출과 본회의 운영 절차 등을 담은 조례·규칙 정비도 추진한다.

정책지원관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지역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와 사무처 조직 및 인력, 의원 월정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의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회의 생중계와 누리집 등 전자 운영 체계와 의사일정 수립 및 안전 처리 등을 담은 의회 운영 절차도 공통 기준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본회의장 위치와 청사 배치 등 향후 통합특별시

의 상징성에 영향을 줄 사항들이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이날 전남도의회가 추경안에 '의회 기증 청사 공간 재배치 시설공사' 예산을 본예산 7억원 대비 8억원 증액한 총 15억원을 편성하자 광주시의회가 긴장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통합의회 청사를 어디로 할지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상황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전남도의회를 통합청사로 낙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측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청사 사무동 증축에 따른 의회 사무처 등 공간 재배치를 위한 예산이 부족해 증액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의회의 소재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로 양측이 협의 과정에서 계속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 주청사가 결국 어디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의회 청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청 기자 goback@gwangnam.co.kr

## “대촌 IC·하부도로 늦어도 연말 안에 개통” 정진욱, 산단 경쟁력 강화·주민 교통편의 개선 기대

총사업비 235억 원을 들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의 대촌IC(이하 나들목)가 하부도로 신설과 함께 늦어도 연말 안에 개통될 전망이다.

남부대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강진 고속도로 대촌나들목 개통에 대비한 하부 연결도로 개설이 오는 12월 완료로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이달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하부도로 개설을 포함한 대촌나들목 신설 변경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촌이 그동안 교통소외지역이었는데 이번 나들목 개통으로 대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대촌나들목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추가설치를 요청하고, 5년 후인 2020년 광주시와 한국

도로공사가 추가 신설을 협약체결함으로써 본격화됐다.

광주~강진고속도로 대촌나들목과 남구 도시첨단산단-에너지밸리산단, 광산구 평동산단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다. 지난해 9월 추진계획이 수립된 '대촌나들목 하부도로'는 길이 150m에 폭 20~30m 규모로 총사업비 20억 원 연액을 광주시에서 부담해 '대촌나들목 설치 사업'에 포함해 공사를 추진했다.

정 의원은 “대촌나들목과 하부도로가 개설되면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에너지밸리산단의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뿐만 아니라 주민의 교통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대촌나들목이 올해 안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광주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1면 '광주 휘발유'서 계속

직장인 김수영씨(42)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800원대 주유소가 많았는데 하루 만에 1800원대로 가격이 크게 올라 놀랐다”며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기름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고 오르기만 할 것 같아 일단 가득 채웠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 운행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운송기사나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은 유가 상승분을 개인이 그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에서 화물차 운송 일을 하는 박성호씨(52)는 “화물차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씩 운행하다 보니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체감이 바로 된다”며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한 달에 나가는 연료비

만 수십만 원씩 더 늘어난다. 운임은 바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기사들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름값 급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8회 임시국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인상 과정에서 과도한 인상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정유사와 주유소 가격 인상 과정을 점검하고 석유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보안 위기경보를 발령했다.